

전남지역 AI 확산에 살처분 범위 확대... 17일까지 2주 적용

중수분, 나주·영암 지역 예방적 살처분 강화
 500m 내 전 축종 및 500m~2km 오리 살처분
 전남 대상 '특별 방역 강화 조치 방안' 마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일부 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세종시, 충북 음성·진천·청주 등 미호강 유역 시·군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에 추가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1km 오리를 추가로 살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남 나주에서 고병원성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중수분은 전남 나주·영암 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

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한다. 이번 조정 범위는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중수분은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 강화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방역 차량·살수차 등 소독자원을 확대 배치해 영암호, 영산강 등 철새도래지 주변과 인근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20일까지 일제 집중소독 기간에 시·군 관계관이 가금 농가 소독 실태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나주·영암 지역의 육용오리 농장 출입구에 대한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해 출입 차량

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육계·육용오리 등은 사육 기간을 단축 조기에 도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역대 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도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전남 합평·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강화하고 전 가금에 대해 7일 주기로 정밀검사(육계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수분은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392개 단속반을 편성해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여부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중수분은 “방역 미흡으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



로 주변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장 관계자들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

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환기자

‘탈마스크’ 예고한 대전, 다른 지자체는?... “아직은 일러”

부산시 내부 검토 중...관광객 몰리는 제주 회의적



대전과 충남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의견을 밝힌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뚜렷했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15개 지자체 중 부산에서만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감안해야 하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이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완화된 수칙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그

간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조하고 있었다”며 “중대본 차원에서 전체 시도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되, 마스크를 벗을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대로 하되 일시적으로 다 같이 벗는 게 아니라 방역을 완화할 수 있는 장소나 사람부터 벗고 병원이나 대중교통은 가장 나중에 벗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매주 목요일에 전국 보건복지담당국장 회의가 있는데 입장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 관계자는 “동절기 유행 확산 우려도

있고 제주도엔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아직 해제를 검토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관계자도 “향후 논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유행이 멈추지 않았고 시민들도 아직은 이르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대본이나 질병관리청 등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에서 발표한 대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전처럼 별도로 준비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강원 관계자도 “전국적인 지침으로 움직이는 것이라서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 이어 충남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의견이 나왔다.

정승호기자

광주 우치공원 미래지향 시설로 탈바꿈하나

시청서 우치공원 활성화 기본구상용역 최종보고회 열려

지역 최대 종합위락공원인 광주 우치공원이 다양한 시설과 함께 미래지향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5일 오후 시청 세미나 2실에서 우치공원 활성화 기본구상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우치공원 활성화 기본구상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광주시는 동물·조경·투자·민자유치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우치공원 활성화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우치공원 활성화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방향과 의견을 수렴했다.

태스크포스는 우치공원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인 우치공원을 시설을 제한이 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현재 공원녹지법상 근린공원은 녹지율 60%, 시설율 4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치공원은 1987년 9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뒤 동물원과 유원시설·체육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현재 공원시설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경우 기존 공원시설 일부를 축소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원성격을 시설을 제한이 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는 산림레포츠 도입을 위해 일몰제로 해제된 산림지역을 공원으로 다시 편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동물원 시설 개선·공원 옆 대야저수지 수변 개발·민자유치 도입 방안 등도 논의됐다. 개발 주제를 ‘광주시 주도’ ‘민간주도’ ‘광주시+민간’으로 구분, 각 주제에 따른 개발 방안도 제시됐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우치공원을 활성화 하려고 해도 시설을 제한에 막혀 새로운 시설 도입이 어려웠다”며 “이번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주제공원으로 변경되면 시설을 제한이 없어져 시민이 좋아하는 시설이 도입 가능하고 우치공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